

2020년 개정세법 중 기업영향 주요 내용

- 절손에 보전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익금불산입항목에서 제외하여 익금산입함(법인법 § 18)
-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 한도금액을 2천4백만원에서 3천6백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 산출시 100억원 이하의 경우 0.3%로 상향조정함(법인법 § 25)
- 사적사용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목적의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특례 대상에서 제외함(법인법 § 27의2)
-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가산세는 5%로 인상함(법인법 § 75의4)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및 미전송가산세 적용 기준일을 공급시시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11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법인법 § 75의8)
- 임원퇴직소득의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조정함(소득법 § 22)
-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2천만원 한도로 조정함(소득법 § 47)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함(소득법 § 164)
-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중소기업 등이 투자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 5%로 인상함(조특법 § 5)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함(조특법 § 13의2)
- 2 이상의 법인이 공동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위해 소재, 부품관련 기업의 출자지분 취득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함(조특법 § 13의3)
-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50% 감면함(조특법 § 18의3)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로 상향조정함(조특법 § 25)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승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함(조특법 § 30의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함(조특법 § 126의2)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함(부가법 § 60)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6833호, 2019.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제18조제6호).
- 나. 내국법인의 주권상장법인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인 경우의 익금불산입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함(제18조의2).
- 다. 지주회사의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40퍼센트인 경우 또는 30퍼센트인 경우와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80퍼센트 또는 50퍼센트인 경우의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함(제18조의3).
- 라.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제24조).
-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제25조).

바. 사적(私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제27조의2제1항).
사. 합병·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45조제5항 및 제46조의4제5항 신설).
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제75조의4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자.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차.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제93조제8호).
카.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함(제93조제10호차목 신설, 제98조제1항제8호).
타.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98조의4제4항 단서, 제98조의5제2항 단서 및 제98조의6제4항 단서 신설).
파.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제98조의6제4항 본문).

현행	개정
<p>●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략)</p> <p>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u>가액</u>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p> <p>7. ~ 8. (생략)</p> <p>●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략)</p> <p>1. (생략)</p>	<p>●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u>가액</u>(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p> <p>7. ~ 8. (현행과 같음)</p> <p>●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div>피출자법인의 구분</div> <div>가. 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주권상장법 인을 말한다. 이 하 같다)</div> <div>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div>	<div>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div> <div>100퍼센트</div> <div>3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div> <div>30퍼센트 이하</div> <div>100퍼센트</div> <div>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div> <div>50퍼센트 이하</div>	<div>익금불 산입률</div> <div>100 퍼센트</div> <div>50 퍼센트</div> <div>30 퍼센트</div> <div>100 퍼센트</div> <div>50 퍼센트</div> <div>30 퍼센트</div>			
2. (생략)					
②·③ (생략)					
●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① (생략)					
1. (생략)					
<div>자회사의 구분</div> <div>가. 주권상장 법인</div> <div>나. 주권상장 법인 외 의 법인</div>	<div>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div> <div>40퍼센트 초과</div> <div>30퍼센트 초과</div> <div>40퍼센트 이하</div> <div>30퍼센트 이하</div> <div>80퍼센트 초과</div> <div>50퍼센트 초과</div> <div>80퍼센트 이하</div> <div>50퍼센트 이하</div>	<div>익금불산입률</div> <div>100퍼센트</div> <div>90퍼센트</div> <div>80퍼센트</div> <div>100퍼센트</div> <div>90퍼센트</div> <div>80퍼센트</div>			
2. (생략)					
②·③ (생략)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④ (생략)					

<div>피출자법인의 구분</div> <div>가. 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주권상장법 인을 말한다. 이 하 같다)</div> <div>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div>	<div>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div> <div>100퍼센트</div> <div>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div> <div>30퍼센트 미만</div> <div>100퍼센트</div> <div>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div> <div>50퍼센트 미만</div>	<div>익금불 산입률</div> <div>100 퍼센트</div> <div>50 퍼센트</div> <div>30 퍼센트</div> <div>100 퍼센트</div> <div>50 퍼센트</div> <div>30 퍼센트</div>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div>자회사의 구분</div> <div>가. 주권상장 법인</div> <div>나. 주권상장 법인 외 의 법인</div>	<div>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div> <div>40퍼센트 이상</div> <div>30퍼센트 이상</div> <div>40퍼센트 미만</div> <div>30퍼센트 미만</div> <div>80퍼센트 이상</div> <div>50퍼센트 이상</div> <div>80퍼센트 미만</div> <div>50퍼센트 미만</div>	<div>익금불산입률</div> <div>100퍼센트</div> <div>90퍼센트</div> <div>80퍼센트</div> <div>100퍼센트</div> <div>90퍼센트</div> <div>80퍼센트</div>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p>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 ③ (생략) ④ (생략) 1. (생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기본한도금액} = A \times B \times \frac{1}{12}$ <p>A: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p> </div> <p>2. (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수입금액</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가. 100억원 이하</td><td>0.2퍼센트</td></tr> <tr> <td>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2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1퍼센트</td></tr> <tr> <td>다. 500억원 초과</td><td>6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td></tr> </tbody> </table> <p>⑤·⑥ (생략)</p> <p>●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p>	수입금액	비율	가.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1퍼센트	다.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p>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p> <p>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p> <p>●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기본한도금액} = A \times B \times \frac{1}{12}$ <p>A: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p> </div> <p>2.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수입금액</th><th>비율</th></tr> </thead> <tbody> <tr> <td>가. 100억원 이하</td><td>0.3퍼센트</td></tr> <tr> <td>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td></tr> <tr> <td>다. 500억원 초과</td><td>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td></tr> </tbody> </table> <p>⑤·⑥ (현행과 같음)</p> <p>●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p>	수입금액	비율	가.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수입금액	비율																
가.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1퍼센트																
다.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수입금액	비율																
가.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퍼센트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현행	개정
<p>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u>감가상각비(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한다)</u>,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 ⑦ (생략)</p> <p>●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u>감가상각비</u>,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p> <p>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p> <p>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p>

현행	개정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① (생략)</p> <p>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u>초과하는 경우</u>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③ ~ ⑦ (생략)</p> <p>●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① (생략)</p> <p>1. (생략)</p> <p>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p>A :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p> <p>B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p> <p>C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p> <p>D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p> </div> <p>② (생략)</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p> <p>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u>산출세액</u>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p>	<p><u>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u></p> <p>2.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의 경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u>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u>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p>A :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p> <p>B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p> <p>C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p> <p>D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p> </div>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p> <p>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u>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u>이 없는 경우(제51조</p>



현행	개정
<p>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 (생략) ③ ~ ⑤ (생략)</p> <p>●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2. (생략) ② ~ ⑧ (생략)</p> <p>●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생략)</p> <p>1. (생략)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p> <p>2. (생략) ② ~ ④ (생략)</p> <p>●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생략)</p> <p>1. ~ 4. (생략)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p>	<p>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p> <p>●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p> <p>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p>

현행	개정
<p>명세를 ……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p> <p>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p> <p>②·③ (생략)</p> <p>● 제79조【매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① ~ ⑥ (생략)</p> <p>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p> <p>⑧ (생략)</p> <p>● 제91조【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 ⑦ (생략)</p> <p>●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p> <p>1. ~ 6. (생략)</p> <p>7. (생략)</p> <p>가. (생략)</p> <p>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후</p>	<p>명세를 ……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p> <p>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79조【매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p> <p>⑧ (현행과 같음)</p> <p>● 제91조【과세표준】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이</p>



현행	개정
<p><u>단 신설></u></p> <p>1) · 2) (생략)</p> <p>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p> <p>가. · 나. (생략)</p> <p><u><신설></u></p> <p>9. (생략)</p> <p>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가. ~ 자. (생략)</p>	<p><u>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 ……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서 삭제></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u>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 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u></p> <p>9. (현행과 같음)</p> <p>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u><신 설></u></p> <p>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p>●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u>예비적</u>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⑤ (생략)</p> <p>1. (생략)</p> <p>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u>예비적</u>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생략)</p> <p>1. ~ 7. (생략)</p> <p>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p> <p>② ~ ⑮ (생략)</p>	<p>차. <u>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u>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화해금·일일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p> <p>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p>●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u>예비적 또는</u>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u>예비적 또는</u>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p> <p>② ~ ⑮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⑤·⑥ (생략)</p> <p>●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③ (생략)</p> <p>●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⑤·⑥ (생략)</p>	<p>●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p>	

현행	개정
제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전 사업연도"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전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전 사업연도"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전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5조의8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5조의8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6845호, 2019.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정고지·부과 납부 대상을 확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제10조제8항).
- 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제39조제1항제2호).
- 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제42조제1항).
- 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 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부과 납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를 추가함(제48조).
- 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제60조제2항제2호).

<p>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명확히 함(제60조제3항).</p> <p>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제60조제9항).</p> <p>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제72조제1항).</p>

현행	개정
<p>●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생략)</p> <p>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p> <p>2. (생략)</p> <p>●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 ⑦ (생략)</p> <p>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⑨·⑩ (생략)</p> <p>●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② (생략)</p>	<p>●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현행과 같음)</p> <p>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p> <p>2. (현행과 같음)</p> <p>●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p> <p>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p> <p>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p> <p>⑨·⑩ (현행과 같음)</p> <p>●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⑤ (생 략)</p> <p>●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생 략)</p> <p>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p> <p>3. 삭제</p> <p>4. ~ 8. (생 략)</p> <p>② (생 략)</p> <p>●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생 략)</p>		<p>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p> <p>3. 삭제</p> <p>4.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현행과 같음)</p>																			
<table><tr><th>구분</th><th>율</th></tr><tr><td rowspan="3">1 음 식 점 업</td><td>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 홍장소의 경영자</td><td>104분의 4</td></tr><tr><td>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td><td>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td></tr><tr><td>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td><td>106분의 6</td></tr></table>		구분	율	1 음 식 점 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 홍장소의 경영자	104분의 4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table><tr><th>구분</th><th>율</th></tr><tr><td rowspan="3">1 음 식 점 업</td><td>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 홍장소의 경영자</td><td>102분의 2</td></tr><tr><td>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td><td>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td></tr><tr><td>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 업자</td><td>106분의 6</td></tr></table>		구분	율	1 음 식 점 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 홍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 업자	106분의 6
구분	율																				
1 음 식 점 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 홍장소의 경영자	104분의 4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구분	율																				
1 음 식 점 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 홍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 업자	106분의 6																			

현행			개정		
2 제 조 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 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2 제 조 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 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 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 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 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 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p>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③ (생략)</p> <p>●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생략)</p> <p>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③ ~ ⑤ (생략)</p> <p>●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p> <p>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p>		



현행	개정
<p>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p> <p>2. 제1호 외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p> <p>② ~ ⑤ (생략)</p> <p>●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①·② (생략)</p> <p>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개인사업자</u>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u>개인사업자</u>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 제60조【가산세】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p> <p>나. 간이과세자</p> <p>2. 거래증빙서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p> <p>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p> <p>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p> <p>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p> <p>나. 가목 외의 경우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u>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u>사업자</u>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 제60조【가산세】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현행	개정
<p>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3. ~ 5. (생략)</p> <p>③ (생략)</p> <p>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p> <p>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p> <p>3. ~ 6. (생략)</p> <p>④ ~ ⑧ (생략)</p> <p>⑨ (생략)</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⑩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1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p>	<p>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p> <p>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p> <p>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p> <p>3.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p> <p>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p> <p>3. ~ 6. (현행과 같음)</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⑨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3항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5호 본문</p> <p>⑩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p>

현행	개정
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85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② (생략)	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p>〈부칙〉</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재화의 공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예정고지·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6조 【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7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제60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화명	1월 3일(금)	1월 6일(월)	1월 7일(화)	1월 8일(수)	1월 9일(목)
미 달러 (USD)	1156.90	1162.70	1169.60	1165.30	1174.10
일본 엔 (JPY)	1065.53	1078.42	1079.02	1074.95	1076.12
영국 파운드 (GBP)	1520.46	1520.11	1540.77	1528.35	1538.36
캐나다 달러 (CAD)	890.88	895.38	902.47	895.94	900.63
홍콩 달러 (HKD)	148.54	149.45	150.51	149.82	151.00
위안화 (CNH)	166.12	166.65	167.76	167.53	168.73
유로화 (EUR)	1292.66	1298.15	1309.54	1299.25	1304.25
호주 달러 (AUD)	808.04	806.56	811.41	800.04	806.20
싱가폴 달러 (SGD)	858.65	860.91	867.01	862.83	869.12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283.03	283.45	284.99	284.71	28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함(제5조제4항).
- 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제6조제3항).
-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8조의3).
-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타인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3조제2항).
- 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3조의2제1항).
- 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



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세액 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3 신설).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4조제1항).
-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가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공제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 자.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비과세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6조의2제1항).
- 차. 조세감면의 목적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
- 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그 다음부터 2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함(제18조).
- 타.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제18조의3 신설).
- 파. 안전설비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시설을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생산성향상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조정함(제25조제1항 및 제2항).
- 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25조의4제1항).
- 거.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25조의6).
- 너.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기한 및 대상기업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함(제29조의3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5년의 납입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함(제29조의6제1항).

- 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제29조의7제1항).
- 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등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30조의2제1항).
- 버.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30조의4제3항).
- 서. 창업자금 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요건인 창업 및 자금사용기한을 2년 및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제30조의5).
- 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제30조의6제2항 신설).
- 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단순 과세이연에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변경하고,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38조의2).
- 처. 코넥스상장기업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도록 함(제46조의7제1항).
- 커. 농업인 등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66조제4항, 제67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
- 터.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있는 특례를 염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제71조제1항).
- 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74조제1항 및 제4항).
- 허. 대토보상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함(제77조의2).
- 고. 박물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중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제83조제1항).
- 노.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에 대한 수용이 완료되어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함(현행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 삭제).
- 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확대되도록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제85조의6).



- 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분할과세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특례대상도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으로 확대함(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8제1항).
- 모.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함(제86조의4 신설).
- 보.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87조제2항).
- 소.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등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87조의7 신설).
- 오. 취약계층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88조의2제1항).
- 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3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조정함(제96조제1항).
- 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97조의3).
- 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97조의8제1항).
- 토.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분의 10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분의 100 감면 후 2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감면하도록 함(제99조의9제2항).
- 포.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함(제99조의10 신설).
- 호.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도록 하고,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함(제100조의3제3항 및 제5항).
- 구.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및 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7제3항).

- 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함(제100조의6제7항).
- 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정산 시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않도록 함(제100조의8제5항).
- 루.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함(제100조의30제3항).
- 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제외함(제100조의32제1항제1호).
- 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시 세무사 등이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104조의8).
- 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제104조의10제1항).
- 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을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로 한정함(제104조의25).
- 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제104조의30).
- 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106조제1항).
- 쿠. 농어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변동신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행정기관 등에 농어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6조의2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16항, 제19항 및 제20항).
- 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등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06조의7제7항).
- 푸.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07조의2제1항 및 제107조의3제1항).
- 후.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지원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08조제1항).
-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09조제9항).
- 느.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 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함(제109조의2제1항).
- 드. 위기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함(제112조 및 제121조의15).
- 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18조제1항제3호).
- 르.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보세공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제118조제1항제22호 신설).
- 브.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이 법에 따른 조세감면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정비함(제121조의2).
- 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를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21조의13제5항).
- 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신설함(제121조의22).
- 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제121조의23제10항).
- 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제126조의2).
- 크.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26조의7제9항).
- 트. 지역특구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과 100분의 50 등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은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함(제132조제1항 및 제2항).
- 프. 국내 대륙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40조제1항 및 제2항).
- 흐.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2조).
- 기.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제144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
<p>●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0.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②·③ (생략)</p> <p>●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p> <p>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p>	<p>●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p> <p>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제25조 및 제118조제1항제22호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p> <p>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p> <p>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p> <p>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p>



현행	개정
<p>⑤ ~ ⑦ (생략)</p> <p>●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p> <p>①·② (생략)</p> <p>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p>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투자(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p> <p>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 투자(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p> <p>①·② (생략)</p> <p>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현행	개정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현행	개정
<p>④ ~ ⑥ (생략)</p> <p>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⑧ ~ ⑫ (생략)</p> <p>●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p> <p>⑤ ~ ⑦ (생략)</p>	<p>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⑧ ~ ⑫ (현행과 같음)</p> <p>●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생략)</p> <p>●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u>(이하 이 조에서 “<u>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u>”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u>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u>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가. (생략)</p> <p>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u>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u>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p> <p>2. 삭제</p> <p>3.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u>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u>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u>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u>(이하 “<u>연구·인력개발비</u>”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u>(이하 이 조에서 “<u>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u>”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u>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u>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u>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u>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p> <p>2. 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u>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u>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p> <p>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p>



현행	개정
<p>●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자의 등에 대한 비과세】 ① (생략)</p> <p>1. ~ 4. (생략)</p> <p>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6. (생략)</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자의 등에 대한 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6.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p>

현행	개정
<p>④·⑤ (생략)</p> <p>●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2. (생략)</p> <p>② ~ ⑤ (생략)</p>	<p>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인력개발·시설투자(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p> <p>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p> <p>3.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이 항에 따른 공동투자자로 서로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공제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p>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p>1.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p> <p>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투자기업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 등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처분되는 주식등은 먼저 취득한 주식등이 먼저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p> <p>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양</p>



현행	개정
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내국법인의 사업·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	④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1. 인수일 당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 인수일 당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취득일 당시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보다 낮아지는 경우
라.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	

현행	개정
$\frac{(\text{당초지분비율} - \text{현재지분비율})}{\text{당초지분비율}} \times \text{제3항에 따른 공제세액}$ <p>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이하 "공동인수"라고 한다)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7.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③ 삭제 ④ ~ ⑦ (생략)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②·③ 삭제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p> <p>●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p>



현행	개정
<p>1. ~ 6. (생략) ② ~ ④ (생략)</p> <p>●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특례】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u>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u>(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 ②·③ (생략)</p> <p>●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생략)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p>	<p><u>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u>)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특례】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u>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u>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u>벤처기업으로부터</u>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p>

현행	개정
<p>.....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u>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u>)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p> <p>③ ~ ⑧ (생략)</p> <p>●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u>산업재산권</u>을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등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 ⑥ (생략)</p> <p>●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p> <p>② 삭제</p> <p>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u>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u>을 원천징수한다.</p> <p>④ (생략)</p>	<p>.....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u>산업재산권</u>을 <u>2020년 12월 31일 이전에</u>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등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삭제</p> <p>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u>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u>을 원천징수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p>	<p>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p>

현	행	개	정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나. (생략)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광산보안시설</u> 라. 마. (생략) 바. 사. (생략) 아.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광산안전시설</u> 라. 마. (현행과 같음) <u><삭 제></u> 아.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표 (생략)		표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
<p>② (생략)</p> <p>●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00분의 2 이상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u>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p>2.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u>2019년 12월 31일까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u>방송프로그램</u></p> <p>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u>영화</u></p> <p>②·③ (생략)</p> <p>●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u>2019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 <u>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u>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00분의 2 이상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u>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u>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u></p> <p>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영화</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u>2020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 <u>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u>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p>



현행	개정
<p><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2. (생략)</p> <p>3. <u>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u></p> <p>4. (생략)</p> <p>② ~ ⑥ (생략)</p> <p>●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u>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u>(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u>5년 이상</u>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③ (생략)</p> <p>●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생략)</p> <p>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u>인원 수</u>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1,200만원)]을 곱한 금액</p> <p>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u>인원 수</u>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p> <p>가.·나.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u>내국인이</u>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p>	<p>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u>1년 이상 근무</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p> <p><삭제></p> <p>2. 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u>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u>(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u>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u>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현행과 같음)</p> <p>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u>인원 수</u>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1,200만원)]을 곱한 금액</p> <p>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u>인원 수</u>(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p> <p>가.·나.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u>내국인이 최초로</u>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p>

현행	개정
<p>……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삭제</p> <p>④·⑤ (생략)</p> <p>●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p> <p>② ~ ⑨ (생략)</p> <p>●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③ (생략)</p> <p>●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② (생략)</p> <p>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9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④ ~ ⑥ (생략)</p> <p>●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p>	<p>부터 ……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u>최초로</u>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u>최초로</u>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삭제</p> <p>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p>●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p>



현행	개정
<p>례】 ① (생략)</p> <p>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⑥ (생략)</p> <p>1. ~ 3. (생략)</p> <p>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p> <p>5. ~ 7. (생략)</p> <p>⑦ ~ ⑭ (생략)</p> <p>●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 ⑤ (생략)</p> <p>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p>	<p>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p> <p>5. ~ 7. (현행과 같음)</p> <p>⑦ ~ ⑭ (현행과 같음)</p> <p>●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p>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p>

현행	개정
<p>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p> <p>1. ~ 3.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방법에 따른다.</p> <p>1. 내국법인 :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p> <p>2. 거주자 :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p> <p>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p>



현행	개정
<p>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와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⑤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3호·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1. ~ 3. (생략)</p>	<p>여야 한다.</p> <p>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p> <p>1. ~ 4.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p> <p>⑦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제3호·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 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현행	개정
<p>②·③ (생략)</p> <p>●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 삭제</p> <p>②·③ (생략)</p> <p>④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u>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⑤ 삭제</p> <p>⑥ (생략)</p> <p>●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 ③ (생략)</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u>소득에</u>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⑤ ~ ⑩ (생략)</p> <p>●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 ③ (생략)</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1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u>소득에</u>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⑤·⑥ (생략)</p> <p>●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생략)</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p>	<p>1. ~ 3. (현행과 같음)</p> <p>●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 삭제</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u>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u></p> <p>⑤ 삭제</p> <p>⑥ (현행과 같음)</p> <p>●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u>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u>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⑤ ~ ⑩ (현행과 같음)</p> <p>●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1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u>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u>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현행과 같음)</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p>



현행	개정
<p>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u>소득</u>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 ⑥ (생략)</p> <p>●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u>축사용지</u>(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u>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u>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 사.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 3. (생략)</p> <p>② ~ ⑧ (생략)</p> <p>●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삭제</p> <p>④ ~ ⑥ (생략)</p> <p>●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p>	<p>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u>소득</u>(<u>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u>)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u>염전 또는 축사용지</u>(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u>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u>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 사.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아. 염전 :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삭제</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p>

현행	개정
<p>………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2019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p> <p>④·⑤ (생략)</p> <p>●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를 <u>2019년 12월 31일까지</u>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 확정신고기한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u>3년의</u>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p> <p>③ (생략)</p> <p>④·⑤ (생략)</p> <p>⑥ (생략)</p>	<p>………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2022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p> <p>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 확정신고기한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u>5년의</u>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p> <p>③ (생략)</p> <p>④·⑤ (생략)</p> <p>⑥ (생략)</p>



현행	개정
<p>●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1. 2. (생략)</p> <p>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⑥ (생략)</p> <p>●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① (생략)</p> <p>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p> <p>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생략)</p> <p>1. 2. (생략)</p> <p>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⑦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현행 제6항과 같음)</p> <p>●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① (생략)</p> <p>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현행	개정
<p>.....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p> <p>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p> <p>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86조의4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p>	<p>다.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p>



현행	개정
<p>●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략)</p> <p>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③ ~ ⑪ (생략)</p>	<p>●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③ ~ ⑪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p> <p>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p> <p>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가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p>	<p>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7. (생략)</p> <p>② 삭제</p> <p>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⑫ (생략)</p> <p>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 손금에 산입한다.</p> <p>⑭ (생략)</p> <p>●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① (생략)</p> <p>1. 제87조,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p> <p>2. ~ 4. (생략)</p> <p>② ~ ⑤ (생략)</p> <p>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p>	<p>●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⑫ (현행과 같음)</p> <p>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 손금에 산입한다.</p> <p>⑭ (현행과 같음)</p> <p>●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① (현행과 같음)</p> <p>1.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p>



현행	개정
<p>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 기관 및 ……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 ⑤ (생략)</p> <p>●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p> <p>1. 2. (생략) ②·③ (생략)</p> <p>●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 제94조제1항제1호</p>	<p>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 기관 및 ……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p> <p>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p> <p>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p> <p>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 제94조제1항제1호</p>

현행	개정
<p>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② ~ ⑥ (생략)</p> <p>●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 ⑨ (생략)</p>	<p>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 ⑨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p> <p>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p> <p>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p> <p>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p> <p>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p>	<p>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p>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p> <p>4. 신청일 현재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조세법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p> <p>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p> <p>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p> <p>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신청일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p> <p>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p> <p>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p>



현행	개정
<p>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 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p> <p>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2019년 7월 25일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p>	<p>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019년 7월 25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2019년 7월 25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p>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② (생략)</p> <p>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u>상황</u>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u>상황</u>에 따른다.</p> <p>④ 삭제</p> <p>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 	<p>●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p> <p>④ 삭제</p> <p>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현행	개정
<p>만, 제2호나목에 따른 <u>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u>는 제외한다.</p> <p>2. <u>홀벌이 가구</u>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p> <p>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p> <p>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u>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u></p> <p>1)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p> <p>2) <u>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u></p> <p>3. <u>맞벌이 가구</u>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p> <p>가. ~ 다. (생략)</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p> <p>⑦ (생략)</p> <p>●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p> <p>① ~ ⑤ (생략)</p>	<p>제외한다.</p> <p>2. <u>홀벌이 가구</u>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p> <p>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p> <p>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p> <p>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p> <p>2) <u>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u></p> <p>3. <u>맞벌이 가구</u>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p> <p>⑦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p> <p>●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p> <p>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 <u>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u></p> <p>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 <u>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u></p> <p>③ (생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p> <p>●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p> <p>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 <u>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u></p> <p>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 <u>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p> <p>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p>

현행	개정
<p>●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⑥ (생략)</p> <p>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p>⑩·⑪ (생략)</p> <p>●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① (생략)</p> <p>1.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p> <p>2.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p> <p>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할</p>	<p>●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p> <p>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p>⑩·⑪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① (현행과 같음)</p> <p>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p> <p>2. 반기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p> <p>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p>



현행	개정
<p>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의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p> <p>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제5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제2항 및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이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p> <p>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p> <p>2.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p> <p>●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 시 환급한다.</p> <p>⑥ ~ ⑧ (생략)</p>	<p>정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p> <p>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본다.</p> <p>●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하여야 한다.</p> <p>1.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p> <p>2.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① · ② (생략) ③ (생략)</p> <p>●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의5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p> <p>1. 2. (생략)</p> <p>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p> <p>③ (생략)</p> <p>●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p> <p>●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①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 등, 환급의 제한, 경정 등,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3항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p>	<p>●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① ·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삭제></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신청·결정·환급 및 환급의 제한·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p>



현행	개정
<p>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u>자녀장려금이 제1항, 제100조의29제3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u> <단서 신설></p> <p>●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략)</p> <p>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p> <p>2. (생략)</p> <p>② ~ ⑩ (생략)</p> <p>●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생략)</p> <p>●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략)</p> <p>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p>	<p>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p> <p>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제1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p> <p>●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p> <p>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p> <p>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⑩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후단 삭제></p> <p>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p> <p>●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p>

현행	개정
<p>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 운송사업의 ……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② ~ ⑨ (생략)</p> <p>●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려는 금액을 ……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p> <p>④ ~ ⑥ (생략)</p> <p>●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② (생략)</p>	<p>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 운송사업의 ……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려는 금액을 ……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104조의30【우수 선회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회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p>	<p>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p>



현행	개정
<p>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p>	<p>2.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운송비용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p> <p>1. (생략)</p> <p>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p> <p>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p> <p>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p> <p>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p>

현행	개정
<p>3. ~ 8의2. (생략) <u><신설></u></p>	<p>3.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p>
<p>9. ~ 12. (생략) ② ~ ⑤ (생략)</p> <p>●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등】 ① ~ ⑧ (생략) ⑨ 관할 세무서장은 <u>농어민등이</u>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2. (생략)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p> <p>1. ~ 4. (생략)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u>가산세</u>로 징수한다. 1. 2. (생략)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 환급·공제세액을 초과</p>	<p>9.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u>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⑪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가산세로 징수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⑫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u></p>



현행	개정
<p>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p> <p>1. ~ 3. (생략)</p> <p>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⑭·⑮ (생략)</p> <p>⑯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p> <p>⑰·⑱ (생략)</p> <p>⑲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⑳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농어민등의 사망·이농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와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⑬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7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p> <p>1.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p> <p>2.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 동안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p> <p>⑭·⑮ (현행과 같음)</p> <p>⑯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p> <p>⑰·⑱ (현행과 같음)</p> <p>⑲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⑳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농어민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망에 관한 자료</p> <p>2. 농어민등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 신고에 관한 자료</p> <p>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p>

현행	개정
<p><u><신 설></u> <u><신 설></u></p> <p>㉑·㉒ (생략)</p> <p>●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p> <p>① ~ ⑥ (생략)</p> <p>⑦ (생략)</p> <p>1. (생략)</p> <p>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text{이자상당액} = \text{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times \text{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times \underline{1\text{만분의 } 3}$</p> <p>나.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text{이자상당액} = \text{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times \text{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times \underline{1\text{만분의 } 3}$</p> <p>다. (생략)</p> <p>●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 부가가치세액을</p>	<p><u>선박위치 관련 자료</u></p> <p>4. 제9항에 따른 추정세액의 납부여부에 관한 자료</p> <p>5. 농어민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등록의 신규·이전·변경·말소에 관한 자료)</p> <p>㉑·㉒ (현행과 같음)</p> <p>●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text{이자상당액} = \text{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times \text{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times \underline{\text{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text{이자상당액} = \text{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times \text{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times \underline{\text{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다. (현행과 같음)</p> <p>●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 부가가치세액을</p>



현행	개정
<p>환급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p> <p>●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p> <p>●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2. (생략) ②·③ (생략)</p> <p>●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① ~ ⑧ (생략)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p> <p>●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을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p>	<p>환급받을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p> <p>●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p>

현행	개정
<p>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 경유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p> <p>② ~ ⑤ (생략)</p>	<p>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p>	
<p>●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생략)</p> <p>1. · 2. 삭제</p> <p>3.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p> <p>4. ~ 13. 삭제</p> <p>14. ~ 21.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현행과 같음)</p> <p>1. · 2. 삭제</p> <p>3.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p> <p>4. ~ 13. 삭제</p> <p>14. ~ 21. (현행과 같음)</p> <p>22. 「관세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관세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p> <p>① · ② (생략)</p> <p>③ 삭제</p> <p>④ <u>외국인투자기업이</u>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p> <p>1. · 2. (생략)</p> <p>⑤ <u>외국인투자기업이</u>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⑥ <u>외국인투자기업이</u>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p>	<p>●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 신청을 한 <u>외국인투자기업에</u> 대해서는 해당 <u>외국인투자기업이</u>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⑤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 신청을 한 <u>외국인투자기업에</u> 대해서는 해당 <u>외국인투자기업이</u>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⑥ <u>외국인투자기업이</u>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p>



현행	개정
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⑨ ~ ⑪ (생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⑫ (생략)	⑫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삭제
3. <u>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u>	3. <u>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 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u>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4. <u>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u>	4. <u>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 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u>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⑬ ~ ⑮ (생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p>●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① ~ ④ (생략)</p> <p>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① ~ ④ (생략)</p> <p>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p> <p>⑥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신설>	
<p>●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p>	<p>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p>
<p>●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②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 ⑧ (생략)</p> <p>●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략)</p> <p>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1. 2. (생략)</p> <p>⑪ (생략)</p> <p>●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p>	<p>●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p> <p>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p> <p>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⑪ (현행과 같음)</p> <p>●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p>



현행	개정
<p>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1. ~ 4. (생략)</p> <p>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u><후단 신설></u></p> <p>1. · 2. (생략)</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p> <p>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u>도서·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u>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u>사용한 금액</u> <u><후단 신설></u></p> <p>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u>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p>	<p>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u>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p> <p>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신문·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u>도서·신문·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u>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u>(이하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u>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인정방법</u>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u>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p>

현행	개정
<p>분의 30</p> <p>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u>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p> <p>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생략)</p> <p>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u>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p> <p>다. (생략)</p> <p>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 × 100분의 40</p> <p>2) (생략)</p> <p>③ ~ ⑩ (생략)</p> <p>●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⑧ (생략)</p> <p>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p> <p>⑩ ~ ⑬ (생략)</p> <p>●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p>	<p>× 100분의 30</p> <p>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u>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p> <p>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u>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p> <p>다. (현행과 같음)</p> <p>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u>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u>) × 100분의 40</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p> <p>⑩ ~ ⑬ (현행과 같음)</p> <p>●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 제104조의14, 제104조의1</p>



현행	개정
<p>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p> <p>② ~ ④ (생략)</p> <p>● 제132조 【<u>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u>】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 ,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 ,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p> <p>4. 제6조(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제96조의2,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p>	<p>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32조 【<u>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u>】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2. (현행과 같음)</p> <p>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 ,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 ,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p> <p>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p> <p>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p>

현행	개정
<p>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u>사업소득</u>(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p> <p>4. 제6조(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p> <p>③·④ (생략)</p> <p>●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p>	<p>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p> <p>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u>사업소득</u>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2. (현행과 같음)</p> <p>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p> <p>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p> <p>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p> <p>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p>



현행	개정
<p>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 ④ (생략)</p> <p>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p> <p><단서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⑥ ~ ⑧ (생략)</p> <p>●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p>	<p>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p> <p>●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p>

현행	개정
<p>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 ,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 ,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p> <p>③·④ (생략)</p>	<p>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1.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 7년 나.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 10년</p> <p>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세액의 경우 (이 항 제1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10년</p> <p>3. 그 밖의 경우 : 5년</p> <p>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 ,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 ,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p> <p>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제3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의 선정일 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생협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
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
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
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
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
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
용례】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
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제8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 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제5항·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0조의6제5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 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3조 【위기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12조 및 제12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제87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로 본다.

제39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관련 이자상당액 계산에 대한 특례 등】 제10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경감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만분의 3으로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0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5조제1항제6호의 시설에 투자(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 받고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30조의5제2항·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등을 양도하고 같은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제85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96조제1항(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2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비과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함(제12조제2호사목 신설).
- 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함(제14조제3항제8호, 제70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8호, 제64조의3 신설).
- 다. 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함(제22조제3항).
- 라. 국고보조금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함(제26조제2항).
-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산출할 때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적용률을 수입금액이 100억

- 원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0에서 1만분의 30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제35조제3항).
- 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 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제5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 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산세 대상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제81조의6제1항 신설).
- 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제81조의7제1항제1호 신설).
- 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 및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일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비사업자를 가산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제81조의10제1항 및 제2항 신설).
- 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하여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 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94조제1항제3호다목, 제104조제1항제12호 및 제118조제2항제1호 신설, 제104조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 현행 제118조의2제3호 삭제).
- 파. 부동산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축(移築)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권리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제94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 하.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과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95조제3항 및 제121조제2항).
- 거.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제104조제4항제3호).
- 너.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8조 신설).
- 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축한



- 건물을 그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14조의2제1항).
- 러.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제119조제10호).
- 머.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제119조제12호카목 신설, 제156조제1항제8호).
- 버. 연금의 실제 수령연차와 연계한 연금소득의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하함(제129조제1항제5호의3).
- 서.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156조의2제4항 단서, 제156조의4제2항 단서 및 제156조의6제4항 단서 신설).
- 어.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제156조의6제4항).
- 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된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축소함(제162조의3제1항).
- 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제164조제1항).
- 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제164조의3제1항).
- 터. "유형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등 자산의 구분에 따른 용어를 「법인세법」상의 용어에 맞추어 정비함(제19조제1항제20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제2호).
- 퍼.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하여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제34조 및 제35조).
- 허.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 신설).

현행	개정
<p>●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① ~ ④ (생략)</p> <p>⑤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p> <p>●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가. ~ 바.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3. ~ 5. (생략)</p> <p>●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 7. (생략)</p> <p>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p> <p>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p> <p>나. ~ 마. (생략)</p> <p>9. (생략)</p> <p>④ ~ ⑥ (생략)</p> <p>●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생략)</p> <p>1.·2. (생략)</p>	<p>●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p> <p>●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p> <p>3. ~ 5. (현행과 같음)</p> <p>●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p> <p>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9.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현행과 같음)</p> <p>1.·2. (생략)</p>



현	행	개	정																		
<p>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p> <p>● 제19조【사업소득】① (생 략)</p> <p>1. ~ 19. (생 략)</p> <p>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업용 유형고정자산</u>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1. (생 략)</p> <p>②·③ (생 략)</p> <p>● 제22조【퇴직소득】①·② (생 략)</p> <p>③ (생 략)</p> <table><tr><td>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td><td>1</td><td>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3</td></tr><tr><td></td><td>×</td><td>×</td></tr><tr><td>10</td><td></td><td>12</td></tr></table>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3		×	×	10		12	<p>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p> <p>● 제19조【사업소득】① (현행과 같음)</p> <p>1. ~ 19. (현행과 같음)</p> <p>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업용 유형자산</u>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1.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22조【퇴직소득】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table><tr><td>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td><td>1</td><td>2012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근무기간 ×3</td></tr><tr><td></td><td>×</td><td>×</td></tr><tr><td>10</td><td></td><td>12</td></tr></table>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	2012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근무기간 ×3		×	×	10		12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3																			
	×	×																			
10		12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	2012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근무기간 ×3																			
	×	×																			
10		12																			

현행	개정
<p>④ ~ ⑥ (생략)</p> <p>●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생략)</p> <p>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u>가액</u>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 ⑩ (생략)</p> <p>●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times \frac{1}{10} \times \frac{\text{근무기간}}{12} \times 2$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p> </div> <p>④ ~ ⑥ (생략)</p> <p>●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u>가액</u>(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p>●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p>



현행	개정
<p>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p> <p>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p> <p>2. (생략)</p> <p>●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략)</p> <p>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p> <p>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3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p> <p>2. 제1호 외의 경우</p> <p>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p>	<p>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p> <p>1. 보험차익 상당액을 제1항의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략)</p> <p>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p> <p>A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p> <p>B :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p> </div> <p>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p> <p>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필요경비 산입한도액 =</p> <p>[{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p> <p>A : 기준소득금액</p> <p>B :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p> </div>

현행	개정
	C :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text{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times 100\text{분의 } 30$ <p>A : 기준소득금액 B :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 기부금 C : 이월결손금</p>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 설>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50조제1항제2호 및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



현행	개정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① (생략)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③ (생략)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기본한도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입금액</th><th>적용률</th></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하</td><td>1만분의 20</td></tr> <tr> <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td></tr> <tr> <td>500억원 초과</td><td>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td></tr> </tbody> </table>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text{기본한도금액} = A \times B \times \frac{1}{12}$ <p>A :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p>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④·⑤ (생략)	<p>2. 수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입금액</th><th>적용률</th></tr> </thead> <tbody> <tr> <td>가. 100억원 이하</td><td>1만분의 30</td></tr> <tr> <td>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20]</td></tr> <tr> <td>다. 500억원 초과</td><td>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1만분의 3]</td></tr> </tbody> </table> <p>④·⑤ (생략)</p>	수입금액	적용률	가.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20]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1만분의 3]
수입금액	적용률								
가.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20]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1만분의 3]								

현행	개정
<p>● 제39조【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u>고정자산</u></p> <p>⑤·⑥ (생략)</p> <p>● 제47조【근로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단서 신설></p> <p>표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u>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한다)</u>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 3. (생략)</p> <p>② 삭제</p> <p>③·④ (생략)</p> <p>●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39조【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u>유형자산</u></p> <p>⑤·⑥ (현행과 같음)</p> <p>● 제47조【근로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p> <p>표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u>사람</u>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p> <p>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p>



현행	개정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p>●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p>	<p>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생략)</p> <p>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p> <p>⑥ (생략)</p>	<p>●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생략)</p> <p>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p> <p>③ ~ ⑥ (생략)</p>	<p>●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생략)</p> <p>1. ~ 7의2. (생략)</p> <p>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p> <p>9.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p> <p>1. ~ 7의2. (현행과 같음)</p> <p>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p> <p>9.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3. 해당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p>② 삭제</p> <p>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p>	<p>●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현행	개정
<p>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p> <p>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p> <p>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p>	

현행	개정
<p>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p> <p>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p> <p>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p> <p>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p> <p>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p> <p>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3.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p> <p>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p>	



현행	개정
<p>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p> <p>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p>	

현행	개정
<p>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p> <p>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p> <p>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p> <p>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p> <p>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p> <p>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p>	



현행	개정
<p><u>신고기장</u>"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장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장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장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p> <p>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장 / 365(윤년에는 366)</p> <p>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p> <p>⑩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말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p> <p>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 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p>	

현행	개정
$\text{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text{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times \text{미가입기간} / 365(\text{윤년에는 } 366)$	
<p>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p> <p>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p> <p>⑫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p> <p>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p>	



현행	개정
<p>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p> <p>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p> <p>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p> <p>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⑮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p>	

현행	개정
<p>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⑩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14항 및 제15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신설>	
<p>●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text{가산세} = A \times \frac{B}{C} \times 100\text{분의 } 5$ <p>A : 종합소득산출세액 B : 사업소득금액 C : 종합소득금액</p> </div>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p>
<p>●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 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하지</p>	<p>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p> <p>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p> <p>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p>	<p>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p>



현행	개정
<p>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p>	$\text{가산세} = A \times \frac{B}{C} \times 100\text{분의 } 20$ <p>A : 종합소득산출세액 B :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C : 종합소득금액</p>
<p>●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p> <p>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p>	<p>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p> <p>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려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p>	<p>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p> <p>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p> <p>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p> <p>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p>	<p>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p>

현행	개정
<p>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p> <p>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p> <p>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text{가산세} = A \times \frac{B}{C} \times 1\text{천분의 } 2$ <p>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B :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C :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p>
<p>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p> <p>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p> <p>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text{가산세} = A \times \frac{B}{C} \times 100\text{분의 } 1$ <p>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B : 미가입기간(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C :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p> <p>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p>



현행	개정
<p>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p> <p>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p>	<p>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p> <p>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p> <p>나.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p>	<p>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p> <p>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p> <p>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p> <p>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p>

현행	개정
<p>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p> <p>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p> <p>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p> <p>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p> <p>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1로 한다)</p> <p>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p>	<p>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3으로 한다)</p> <p>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사업자로 보고 그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p> <p>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p> <p>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p>
<p>●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p>	<p>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p>



현행	개정
<p>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p> <p>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p> <p>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p> <p>●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p> <p>●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p> <p>●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p>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p> <p>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p> <p>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p>

현행	개정
<p>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p> <p>1. ~ 3. (생략)</p> <p>⑥ (생략)</p> <p>●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생략)</p> <p>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p> <p>③ ~ ⑥ (생략)</p> <p>●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생략)</p> <p>1. 2. (생략)</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4. (생략)</p> <p>가. <u>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u></p> <p>나. (생략)</p> <p>다. (생략)</p> <p>1) (생략)</p> <p>2) <u>해당 법인이</u>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라.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나. (현행과 같음)</p> <p>다. <u>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p> <p>4. (현행과 같음)</p> <p>가. <u>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u></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u>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u>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현행	개정
<p>5. (생략)</p> <p>② (생략)</p> <p>●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② (생략)</p> <p>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u>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u>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④·⑤ (생략)</p> <p>●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생략)</p> <p>1. (생략)</p> <p>가. (생략)</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u>환산가액</u></p> <p>2.·3.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 (생략)</p> <p>가. (생략)</p> <p>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u>환산가액</u>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p> <p>다. (생략)</p> <p>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u>환산가액</u>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p> <p>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u>환산가액</u>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p> <p>나. (생략)</p> <p>③ ~ ⑦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u>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u>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u>환산취득가액</u>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p> <p>2.·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u>환산취득가액</u>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p> <p>다. (현행과 같음)</p> <p>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u>환산취득가액</u>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p> <p>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u>환산취득가액</u>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p> <p>나.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생략)</p> <p>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나 (생략)</p> <p>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u>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p> <p>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u>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u>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p> <p>2. ~ 7. (생략)</p> <p>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④ ~ ⑥ (생략)</p> <p>●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u>환산가액</u>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p> <p>② ~ ④ (생략)</p> <p>●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생략)</p> <p>1. ~ 10. (생략)</p>	<p>●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현행과 같음)</p> <p>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u>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p> <p>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u>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u>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p> <p>2.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u>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u>환산취득가액</u>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u>환산취득가액</u>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생략)</p> <p>1. ~ 10. (생략)</p>



현행	개정
<p>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나. (생략) <u><신설></u></p> <p>12. (생략)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p> <p>1.·2. 삭제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p> <p>4. (생략)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u>큰 것으로</u>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p> <p>1.·2. (생략) ⑥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 인하할 수 있다. ⑦·⑧ (생략)</p> <p>●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p>	<p>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나. (현행과 같음)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u>중소기업의 주식등</u> <u>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u> 나. <u>그 밖의 주식등</u> <u>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u></p> <p>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p> <p>1.·2. 삭제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현행과 같음)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u>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u>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p> <p>1.·2.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 인하할 수 있다. ⑦·⑧ (현행과 같음)</p> <p>●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p>

현행	개정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생략) ②·③ (생략)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p>●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p>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p>●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⑨ (생략)</p>	<p>●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⑨ (현행과 같음)</p>
<p>●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② (생략)</p>	<p>●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② (생략)</p>

현행	개정
<p>………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p> <p>1.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p> <p>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p> <p>② (생략)</p> <p>●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② (생략)</p> <p>●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 2. (생략)</p>	<p>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p>A :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p> <p>B :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p> <p>C :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p> </div> <p>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② (생략)</p> <p>●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② 삭제</p> <p>③ (생략)</p> <p>● 제118조의10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⑥ (생략)</p> <p>● 제118조의11 【서울 및 산출세액】 (생략)</p> <p>● 제118조의1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③ (생략)</p> <p>● 제118조의15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① ~ ⑥ (생략)</p> <p>● 제118조의18 【준용규정 등】 ①·② (생략)</p> <p>●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8의2. (생략) 9. (생략) 가. (생략)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후단 신설> 1)·2) (생략)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p>	<p>②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서울과 산출세액】 (현행과 같음)</p> <p>●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및 가산세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② (생략)</p> <p>●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8의2.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2) (현행과 같음)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삭제></p>

현행	개정
<p>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p> <p>가.·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11. (생략)</p> <p>12. (생략)</p> <p>가. ~ 차.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p>●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 ③</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p> <p>11.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가. ~ 차. (현행과 같음)</p> <p>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화해금·일일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p> <p>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p>●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 ③</p>



현행	개정
<p>(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u>예비적</u>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⑤ (생략)</p> <p>1. (생략)</p> <p>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u>예비적</u>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생략)</p> <p>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 ⑥ (생략)</p> <p>●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생략)</p> <p>1. ~ 5의2. (생략)</p> <p>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p> <p>6. ~ 8.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생략)</p> <p>1. ~ 7. (생략)</p> <p>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p>	<p>(현행과 같음)</p> <p>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u>예비적 또는</u>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u>예비적 또는</u>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현행과 같음)</p> <p>1. ~ 5의2. (현행과 같음)</p> <p>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u>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p> <p>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p> <p>6. ~ 8.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부</p>

현행	개정
<p>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p> <p>② ~ ⑮ (생략)</p> <p>●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⑤·⑥ (생략)</p> <p>●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생략)</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③ (생략)</p> <p>●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 귀속자가 ……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⑤·⑥ (생략)</p>	<p>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p> <p>② ~ ⑮ (현행과 같음)</p> <p>●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 ③ (생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 ⑨ (생략)</p> <p>●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② ~ ⑩ (생략)</p> <p>●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 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p> <p>2. (생략)</p> <p>② ~ ⑤ (생략)</p>	<p>●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 ⑨ (현행과 같음)</p> <p>●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②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19조 【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등을 처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p> <p>제19조 【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등을 처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5조의3제2항(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6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7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0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8조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9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제10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명세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총수입금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국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자산 중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제2항제1호, 제118조의2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이촉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을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 ·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을 확대·완화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함(제4조의2제5항).
- 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퍼센트로 변경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총급여액 수준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제18조제6항).
- 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함(제18조제9항 신설).
- 라.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제21조제1항).
- 마.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낮춤(제23조의2제1항).



- 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제30조).
- 사.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제43조제2항).
- 아.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식 등의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함(제45조의2제4항).
- 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함(제45조의5).
- 차.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제48조제2항).
- 카.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제50조제3항제1호).
- 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50조제6항).
- 파.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 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함(제50조의3제1항제1호).
- 거.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52조의2).
- 너.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제63조제3항).
- 더.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제71조제2항제1호).

현	행	개	정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 ④ (생략)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 ④ (생략)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 ④ (현행과 같음)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현행	개정
<p>한다.</p> <p>⑥ ~ ⑨ (생략)</p> <p>● 제18조【기초공제】① ~ ⑤ (생략)</p> <p>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p> <p>1. (생략)</p> <p>가. ~ 다. (생략)</p> <p>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p> <p>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p> <p>2. (생략)</p>	<p>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p>● 제18조【기초공제】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p> <p>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p> <p>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p> <p>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p> <p>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p> <p>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⑦ (생략)</p> <p>⑧ 제6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같은 항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 한국은행 또는 채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⑨ (생략)</p> <p>⑩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p> <p>●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⑦ (생략)</p> <p>⑩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 한국은행 또는 채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p> <p>⑧ (현행 제9항과 같음)</p> <p>⑪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p> <p>●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p>

현행	개정
<p>④ (생략)</p> <p>●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p> <p>② (생략)</p> <p>●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p> <p>1. 2. (생략)</p> <p>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p> <p>②·③ (생략)</p> <p>●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p>	<p>한정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삭제></p>



현행	개정
<p>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 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1. · 2. (생략)</p> <p>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p> <p>●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① (생략)</p> <p>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p> <p>③ (생략)</p> <p>●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후단 신설></p> <p>⑤ 삭제</p> <p>⑥ (생략)</p> <p>●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p> <p>⑤ 삭제</p> <p>⑥ (현행과 같음)</p> <p>●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p>

현행	개정
<p>계산식 (생략)</p> <p>② ~ ⑤ (생략)</p> <p>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u>주식보유비율의 계산</u>,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5조의5【<u>특정법인과</u>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p>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p>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으로 본다.</p> <p>계산식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u>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u>,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45조의5【<u>특정법인과</u>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p>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
<p>●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p> <p>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p> <p>1. ~ 6. (생략)</p> <p>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p> <p>8. (생략)</p> <p>③ ~ ⑪ (생략)</p> <p>●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p> <p>8. (현행과 같음)</p> <p>③ ~ ⑪ (현행과 같음)</p> <p>●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p> <p>2. (현행과 같음)</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p>

현행	개정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 의무】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 7. (생략) ② ~ ④ (생략)</p> <p>●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p>	<p>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 의무】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p> <p>1. 재무제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2. ~ 6.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p>



현행	개정
<p>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p> <p>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p> <p>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p> <p>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p> <p>②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인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제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p> <p>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p> <p>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p> <p>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p> <p>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p> <p>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인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인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p> <p>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p>

현행	개정
<p>한 경우는 제외한다.</p> <p>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p> <p>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p> <p>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 후에 해당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⑦ 제4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58조【납부세액공제】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② (생략)</p> <p>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p>	<p>한 경우는 제외한다.</p> <p>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p> <p>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p> <p>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 후에 해당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⑦ 제4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58조【납부세액공제】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p>



현행	개정
<p>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생략)</p> <p>● 제71조【연부연납】① (생략)</p> <p>② (생략)</p> <p>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u>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u>(「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u>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u> ……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p> <p>2.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1. ~ 3. (생략)</p> <p>4. 상속받은 <u>가업을</u>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u>가업에</u>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5. (생략)</p> <p>⑤ (생략)</p> <p>● 제73조【물납】① (생략)</p> <p>1. · 2. (생략)</p> <p>3. 상속세 납부세액이 <u>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u> 초과할 것</p> <p>② (생략)</p> <p>● 제78조【가산세 등】① · ② 삭제</p> <p>③ ~ ⑩ (생략)</p>	<p>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 제71조【연부연납】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u>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u>(「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u> ……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상속받은 <u>사업을</u>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u>그 사업에</u>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5.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73조【물납】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상속세 납부세액이 <u>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u> 초과할 것</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78조【가산세 등】① · ② 삭제</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단서 신설></p> <p>⑫·⑬ (생략)</p> <p>●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① (생략)</p> <p>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크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⑥ (생략)</p>	<p>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⑫·⑬ (현행과 같음)</p> <p>●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크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종전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p>	



현행	개정
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장애인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등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서울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에서 등록지로,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 나.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추후에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7항 신설, 제21조제1항).
- 다. 서울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제11조제1항제8호).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제4항).
- 마. 전자적인 방식의 신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 신고·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앞당기고,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변경함(제60조).
- 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는 한편, 납입된 지방소비세액 중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되, 우선 납입하는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제69조제2항, 제71조 및 부칙 제2조).
- 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9조제1항제1호).
- 아.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후단, 제96조제1항 후단,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 신설).
- 자.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95조제4항·제5항, 제103조의5제4항·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제10항 신설).
- 차.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103조의3제5항).
- 카.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함(제103조의5제1항 전단 및 제103조의7제1항 전단).
- 타.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3조의9제2항).

- 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06조의2 신설).
- 하.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118조).
- 거.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로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의3 신설).
- 너.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함(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현행	개정
<p>●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 ⑬ (생략)</p> <p>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垔)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단서 신설></p> <p>⑮ (생략)</p> <p>● 제8조【납세지】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 4. (생략)</p> <p>5. 선박 : 선적항 소재지 <단서 신설></p>	<p>●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 ⑬ (현행과 같음)</p> <p>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垔)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p> <p>⑮ (현행과 같음)</p> <p>● 제8조【납세지】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선박 :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p>



현행	개정
<p>6. ~ 9. (생략) ②·③ (생략)</p> <p>● 제9조【비과세】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p> <p>② ~ ⑦ (생략)</p> <p>● 제10조【과세표준】① ~ ⑥ (생략) <신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생략)</p> <p>1. ~ 7. (생략)</p> <p>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p>	<p>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p> <p>6.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9조【비과세】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 제10조【과세표준】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p>

현	행	개	정															
<p>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p> <table><tr><td>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td><td>=</td><td>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td><td>×</td><td>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td></tr></table> <p>②·③ (생 략)</p> <p>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신 설></p> <p><신 설></p>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p>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p> <table><tr><td>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td><td>=</td><td>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td><td>×</td><td>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td></tr></table> <p>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p> <p>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table><tr><td>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td><td>×</td><td>$\frac{2}{3\text{억원}} - 3$</td><td>) ×</td><td>$\frac{1}{100}$</td></tr></table> <p>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p>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frac{2}{3\text{억원}} - 3$) ×	$\frac{1}{100}$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frac{2}{3\text{억원}} - 3$) ×	$\frac{1}{100}$														



현행	개정
<p>●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① (생략)</p> <p>1. (생략)</p> <p>2. 차량</p> <p>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나. 그 밖의 자동차</p> <p>1) · 2) (생략)</p> <p>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p> <p>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 1천분의 20</p> <p>3. ~ 7. (생략)</p> <p>② (생략)</p> <p>●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p>	<p>●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차량</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1천분의 20</p> <p>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 1천분의 20</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 1천분의 20</p> <p>3.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p>

현행	개정
<p>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p> <p>1. · 2. (생략) ③ ~ ⑧ (생략)</p> <p>● 제15조【세율의 특례】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제7조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3. ~ 6. (생략) <u><신설></u> 7. (생략)</p> <p>●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u><신설></u> <u><신설></u></p> <p>② (생략)</p> <p>● 제27조【과세표준】①·② (생략)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p>	<p>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p> <p>● 제15조【세율의 특례】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3. ~ 6. (현행과 같음) 7. 제7조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8. (현행 제7호와 같음)</p> <p>●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p> <p>● 제27조【과세표준】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같은 조 제6항에 따라</p>



현행	개정
<p>특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p> <p>④·⑤ (생략)</p> <p>●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p> <p>③ ~ ⑧ (생략)</p> <p>●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① (생략)</p> <p>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p> <p>● 제71조【납입】①·② (생략)</p> <p>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p>	<p>계산한 취득가액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후단 삭제></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후단 삭제></p> <p>● 제71조【납입】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

현	행	개	정
		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5호에 따른 목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제75조 【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		● 제75조 【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	



현행	개정
<p>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p> <p>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p> <p>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신설＞</p> <p>● 제79조의2 【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등분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p>	<p>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 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p> <p>1. (생략)</p>	<p>● 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p> <p>1. (생략)</p>

현행	개정
<p>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u>신고하는 달부터</u>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u>신고한 달의</u> 종업원 급여 총액을 <u>신고한 달의</u>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p> <p>⑤ (생략)</p> <p>● 제89조【납세지 등】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91조【과세표준】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① ~ ④ (생략)</p> <p>⑤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p>	<p>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u>해당 월부터</u>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u>해당 월의</u> 종업원 급여 총액을 <u>해당 월의</u>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89조【납세지 등】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91조【과세표준】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u>소득세의 과세표준</u>(「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u>소득세의 과세표준</u>(「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p> <p>●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① ~ ④ (생략)</p> <p>⑤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p>



현행	개정
<p>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⑥·⑦ (생략)</p> <p>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 및 제103조의9를 준용한다.</p> <p>⑨ (생략)</p> <p>⑩ (생략)</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p> <p>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에 ……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p> <p>나. (생략)</p> <p>⑪ (생략)</p> <p>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⑬·⑭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②·③ (생략)</p>	<p>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 및 제103조의9를 준용한다.</p> <p>⑨ (현행과 같음)</p> <p>⑩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p> <p>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에 ……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p> <p>나. (현행과 같음)</p> <p>⑪ (현행과 같음)</p> <p>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⑬·⑭ (현행과 같음)</p> <p>⑮ 제5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와 매매차손을 포함한다)과 그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p> <p>●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u><신 설></u></p> <p><u><신 설></u></p> <p>● 제96조【수정신고 등】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 (생략)</p> <p>● 제99조【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제13항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p> <p>●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①</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 제96조【수정신고 등】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p> <p><u><삭 제></u></p> <p>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u><후단 삭제></u></p> <p><u><삭 제></u></p> <p>● 제99조【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p> <p>●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①</p>



현행	개정
<p>~ ③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p> <p>⑤·⑥ (생략)</p> <p>● 제103조【과세표준】① (생략)</p> <p>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 제118조의3·제118조의4·제118조의6·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또는 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p> <p>● 제103조의3【세율】① (생략)</p> <p>1. ~ 7. (생략)</p> <p>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p> <p>9.·10. (생략)</p>	<p>~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 제103조【과세표준】① (현행과 같음)</p> <p>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p> <p>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p> <p>● 제103조의3【세율】①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9.·10.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나. (생략) <u><신설></u></p> <p>12. (생략) ② (생략)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생략) 2.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1.·2.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u><단서 신설></u></p> <p>4. (생략)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u>큰 것으로</u>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p>	<p>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나. (현행과 같음)</p> <p>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에 대한 <u>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u>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양도소득에 대한 <u>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u></p> <p>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u>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후단 삭제></u></p> <p><u><삭제></u> <u><삭제></u></p> <p>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u>다만, 지정지역의 공공가 있는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4. (현행과 같음)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u>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u>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p>



현행	개정
<p>1. (생략)</p> <p>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u>합계액</u> <단서 신설></p> <p>⑦ ~ ⑩ (생략)</p> <p>●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p> <p>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u>신고 기한까지</u>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 "예정신고"라 한다) 하야 한다. <후단 신설></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p> <p>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u>신고</u></p>	<p>1. (생략)</p> <p>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u>합계액</u>.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p> <p>⑦ ~ ⑩ (현행과 같음)</p> <p>●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p> <p>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u>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u>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 "예정신고"라 한다) 하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p> <p>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u>신고</u></p>

현행	개정
<p>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②·③ (생략)</p> <p>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 ⑧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① (생략)</p> <p>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③ (생략)</p> <p>●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① ~ ④ (생략)</p>	<p>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p> <p>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취득가액 등】① (생략)</p> <p>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①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u><신설></u></p> <p>⑤ (생략)</p> <p>● 제103조의19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 제103조의21 【세액계산】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p> <p>● 제103조의24 【수정신고 등】 ① ~ ⑥ (생략)</p> <p>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u>수정신고·납부</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3조의34 【과세표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 제103조의19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u>법인세의 과세표준</u>(「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p> <p>● 제103조의21 【세액계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u>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u>(「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p> <p>● 제103조의24 【수정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u>수정신고·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03조의34 【과세표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u>법인세의 과세표준</u>(「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p>

현행	개정
<p>● 제103조의41【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에 관련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서 ……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④·⑤ (생략)</p> <p>●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① (생략) 1. ~ 3. (생략) 4.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 (생략)</p>	<p>● 제103조의41【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p> <p>●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업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서 ……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① (생략)</p> <p>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후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p> <p>2. ~ 5.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① (현행과 같음)</p> <p>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p> <p>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p> <p>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p> <p>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생략)</p> <p>② 2019년 과세기간 및 2020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p>

현행	개정
	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p>●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확대·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등 평가기준, 분리과세 확대·추가 요청방법 등 평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111조【서울】① (생략)</p> <p>1. 토지</p> <p>가.·나. (생략)</p> <p>다. 분리과세대상</p> <p>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p> <p>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p> <p>3) (생략)</p> <p>2. ~ 5. (생략)</p> <p>②·③ (생략)</p> <p>●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 제111조【서울】① (현행과 같음)</p> <p>1. 토지</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분리과세대상</p> <p>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p> <p>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p> <p>3) (현행과 같음)</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신설>	
<p>●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제</p>	<p>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p>



현행	개정								
<p>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p> <p>②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p>	<p>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①·② (생략)</p> <p>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p> <p>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p> <p>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p> <p>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p>	<p>●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세액 신고납부기간</th><th>계산식</th></tr> </thead> <tbody> <tr> <td>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td><td rowspan="2">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r> <td>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td></tr> <tr> <td>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td><td rowspan="2">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td></tr> <tr> <td>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td></tr> </tbody> </table> <p>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p> <p>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p> <p>3. 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p>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행	개정
<p>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p>	<p>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계 산 식</p> <p>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div>
<p>⑤ (생략)</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141조 【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p>	<p>● 제141조 【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p>
<p>● 제142조 【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p>	<p>● 제142조 【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p> <p>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 각 목의 것</p> <p>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p> <p>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p> <p>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p> <p>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 각 목의 것</p> <p>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p>



현행	개정
<p>● 제143조【<u>납세의무자</u>】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p>● 제144조【<u>납세지</u>】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자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전용수 : 발전소의 소재지 	<p>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p> <p>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p> <p>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p>● 제143조【<u>납세의무자</u>】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p>● 제144조【<u>납세지</u>】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 각 목의 납세지

현행	개정
<p>나. 지하수 :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p> <p>다.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p> <p>라.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p> <p>마. 원자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p> <p>바. 화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p> <p>2. 특정부동산</p> <p>가.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p> <p>나.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p> <p>다. 토지 : 토지의 소재지</p> <p>● 제145조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u>특정자원</u></p> <p>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u>특정자원</u></p> <p>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u>특정부동산</u>(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p> <p>5.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p>	<p>가. 발전용수 : 발전소의 소재지</p> <p>나. 지하수 :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p> <p>다.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p> <p>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 각 목의 납세지</p> <p>가.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p> <p>나. 원자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p> <p>다. 화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p> <p>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 각 목의 납세지</p> <p>가.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p> <p>나.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p> <p>● 제145조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u>경우</u></p> <p>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u>경우</u></p> <p>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u>건축물과 선박</u>에 대해서는 <u>소방분</u>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현행	개정
<p>6.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p> <p>2. 2의2. (생략)</p> <p>3. (생략)</p> <p>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p> <p>● 제147조 【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p> <p>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2. 3. (생략)</p> <p>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p> <p>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컨테이너 :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 원</p> <p>2.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p> <p>3.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p> <p>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p> <p>2. 2의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p> <p>● 제147조 【부과·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p> <p>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p> <p>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p>

현행	개정
<p>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p> <p>④ <u>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u></p> <p>⑤ (생략)</p> <p>⑥·⑦ (생략)</p> <p>⑧ (생략)</p>	<p>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p> <p>④ <u>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⑥·⑦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부칙></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p>1.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 제93조제10항·제12항,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3조의19, 제103조의21제2항, 제103조의34, 제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p> <p>2. 제128조제3항·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p> <p>제2조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p> <p>제6조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신고 등의 관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9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7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8조 【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9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10조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p>	



현	행	개	정
<p>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 및 제10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11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1항 전단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12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13조 【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14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p> <p>제15조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6조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한다.</p> <p>제44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p> <p>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3조제1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1장에 따라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p> <p>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p> <p>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1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